

靑 “日, 최소한의 선 지켜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건설적인 답’ 요구한 아베에 “우리 입장 분명히 설명”

청와대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한 “건설적인 답”을 요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했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대북 밀반출 문제에 대해 제재위(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검토를 받고 있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분명히 (입

장을) 설명했다”며 “한일 관계가 과거와 미래의 투트랙으로 나뉘어 가야한다는 우리 입장에 누차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라도 물론 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문제라 했다가 오늘은 또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한

일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며 “한국 측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

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일본 선거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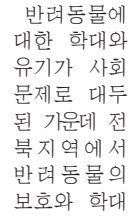
“이낙연 국무총리가 귀국했는데 대일 특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지난주) 5당 대표가 오셨을 때도 무조건 특사를 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적 수용성이 최우선 쉐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도내 반려동물 보호 제도적 근거 마련

김정수 도의원 발의 조례안, 농산경제위 심의 통과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회기 중인 제365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 농산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커져 반려동물 관련 시장과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2017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593만 가구로 지난 2013년에 비해 6.3%가 증가했고, 전라북도도는 전국의 1.9%에 해당하는 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기준 도내에서는 약 6042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해 3432마리는 반환 및 입양됐으나, 2106마리는 자연사 및 안락사 처리되고 504마리는 보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및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진성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기한 연장

당정, 세법개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 성장 지원에 방점을 두고 2019년 세법 개정안에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담았다고 22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 3대 기본방향을 기준으로 세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반도체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뉴시스

이효성 방통위원장, 작심 사표... “규제 일원화 바로잡아야”

이효성 방통통신위원장이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사표를 던졌다. 특히 그는 퇴진 의지를 밝힌 자리에서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를 방통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 부처가 하는 ‘어불성설’의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을 날렸다.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 기자회견에서 “제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 및 계획”을 브리핑한 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며 “정부의 일원인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팀워크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의 첫 방통위원장인 이 위원

장은 2017년 8월 1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특히 그는 4기 방통위 출범 이후 2년간 추진된 정책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언급한 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출범 후 2년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 미디어정책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특히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방통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며 “방통통신 규제 기관으로 방통위의 업무 관장에 관한 것”이라고 가리켰다.

그는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장 질서 확립,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 업무에 속한다”며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며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렇게 해야 방통통신 정책에서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종합성·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업무를 지속할 계획이 다.

/뉴시스

국회 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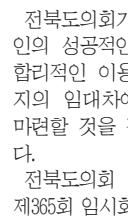
외통위는 이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주체로 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할 것 등 4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뉴시스

“농지 임차인 보호 법제 기반 마련해야”

강용구 도의원, 정부에 촉구



전북도의회가 귀농·귀촌(귀산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산)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농지 및 산지의 임대차에 관한 법제 기반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2)은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 발의한 ‘농(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원 농산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2016년 당시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0%, 임차농지 비율은 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지이용의 현실은 이미 임대차 농지가 절반에 이르렀음에도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지의 경우 최근 귀산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임산물 재배 소득을 올리는 등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산지 임대차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농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농지법의 농지임대차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산지를 활용한 임산물 소득 창출 수요 증가로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용구 의원은 “최근 농(산)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착 그들이 농(산)지를 빌려 농사를 짓거나 임산물을 재배하고 싶어도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항상 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농(산)지 임차인이 안심하고 농업 또는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